

“교권 침해하면 교육청이 해결”…교육감 직속기구 뜯다

광주특별시교육청, 내년 3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민원·법률·상담전문가 배치…중대사안 1시간 이내 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안이 88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예방부터 사안 대응, 피해 교원의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2023~2025학년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5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 2025년 183건이다.

전남은 같은 기간 376건으로,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10건으로 다시 늘었다.

광주·전남 모두 2024년 감소 이후 2025년 심의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과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을 총괄·조정하고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통합 지원체계는 준비단계(10~12월), 시행단계(2027년 1~6월), 고도화단계(2027년 7~12월) 등 3단계로 추진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별 출동 기준을 명확히 한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을 마련한다.

중대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민원은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에 나선다.

교육활동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와 법률 상담,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 등을 지원하는 ‘책임형 발착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심리·법률 상담과 소송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도 가동한다.

2027년 3월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1일 광주특별시 큰별초등학교에서 김대중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현장지원팀은 정척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개발 등을 맡고, 현장 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현장 대응과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교권보호관에는 민원·법률·상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배치해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을 설치해 교육활동 보호 사안과 정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교내 갈등 조정과 화해·중재를 위한 ‘교육공

동체 화해중재단’도 구성한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법률 지원, 교원 심리상담, 복귀 지원 등을 1대1로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광주권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리 파악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별 상황에 맞춘 전문가 컨설팅과 학부모 소통·민원 대응 지원, 교직원 대상 예방·대응

연수 등 ‘핀셋 지원’도 제공한다.

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과 학교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지원체계 가동 첫 날인 1일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학교 현장을 찾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이강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 상임회장 연임

주민주권 지방정부 연대 ‘속도’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사직)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연임에 성공하며 주민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를 계속 이끌어간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호철현 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의 제2차 정기회의에서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김이강 정장이 제6대에 이어 제7대 상임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전국 34개(광역시 3개, 기초 31개) 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김이강 상임회장은 민선 8기 동안 축적



한 생활정부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상임회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 진짜 주민주권이 시작된다”며 “지난 10년의 협의회 성과를 발판 삼아 지방정부가 주민의 결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의에서는 마을자치와 주민주권을 주제로 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새로운 주민주권시대’, 우승희 영암군수는 ‘마을이 브랜드가 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주민 수용성 우선”

고성석 의원 촉구…여수·광양 도입 가능성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사직)이 1일 “통합특별시가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의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 검토 여부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R은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6월 부산 기장읍 I-SMR 1호기 건설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SMR을 포함한 국내 첫 민간원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의 녹색전환(GX)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하는 계획이 언론보도로 공개됐다”며 “정작 검토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K-GX(탈탄소녹색대전환)와 SMR 행사에서 수소원전체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SMR이 주목됐다”며 “이 자리



에서 광양지역에 170MW급 i-SMR 4기를 묶어 680MW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고 언급했다.

다. 그러면서 “여수에서는 민형배 특별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와 맺은 SMR 점목 RE100 산단 정책협약을 두고, 여수환경운동연합이 RE100 취지에 맞지 않고 폐기물·안전 문제도 있다며 협약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고성석 의원은 “SMR은 소형원자로로 이름 붙였을 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영광 한빛원전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며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데다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만큼 주민들의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추진하는 것이 미래 산업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산재 반복시 영업 5% 과징·응급실 뺄뺄이 방지법 국회 통과

복지급여 직권 신청 기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군·북부·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 확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들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와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도 명시했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건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뺄뺄이’(응급환자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요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중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군·북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해당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 광양 첫 민간정원 ‘일곱계절’ 개방

특별시 35호 등록…6300㎡에 수목·초화류 510여종 조성

육성하고 있다.

서순미 정원주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 광양으로 귀촌

해 정성을 다해 가꾼 일곱계절을 앞으로 정원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강명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은 “2026년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한

일곱계절이 특별시 35번째이자 광양 첫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생활권 정원 열린 ‘2026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개인정원 부문 대상을 수상해 정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통합특별시는 2020년부터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정원을 발굴하고 민간정원 등록을 지원해 시민의 생활

속 휴식공간이자 지역 관광자원으로



‘광양 일곱계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양 ‘일곱계절’을 광양지역 첫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식 개방했다고 1일 밝혔다.

‘일곱계절’은 통합특별시 제35호 민간정원으로, 6300㎡ 규모에 510여종의 수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져 있다. 정원 주인 서순미씨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2019년 귀촌한 뒤 정성껏 가꾼 정원이다.

독일 정원가 칼 프리스터의 자연주의 정원 철학에 영향을 받아 조성한 ‘일곱계절’은 사계절에 초봄·초여름·늦가을을 더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느끼도록 꾸몄다.

수평천 물을 활용한 수변 공간과 자연형 개울,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져 생태성과 경관성을 갖춘 것이

‘명냥이랑 가을 소풍’ 펫크닉 17~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명냥이’와 가을 소풍을 즐기며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법도 배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선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7~18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반려동물산업문화제: 전남광주 펫크닉(pet+picnic)’을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특별전시’를 떠나는 명냥이 가을 소풍’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기간 반려동물은 ‘슬기로운 반려생활’, ‘명냥이 무엇이든 물어보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반려동물 건강과 행동 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1초의 기적,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수의사와 함께 반려동물 심폐소생술(CPR) 절차를 배우고 직접 모형으로 체험할 수 있어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